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감사실 청렴감찰부

전부개정 2021.10.19. 지침 제347호

개정 2022.9.6. 지침 제37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
  - 나. 심사평가원을 지도·감독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임직원의 부패행위등을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익명신고시스템"이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

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등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관계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자로 하여금 신고대상과 부패행위등의 증거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 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등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등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여부의 결정은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칙」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9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다만,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0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신고내용을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 취하 의사를 표시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2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6.>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등의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

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승인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5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9.6.>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

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6.>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신고자의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협조자 보호)

[본조신설 2022.9.6.]

**제18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등의 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 제40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관계 제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에 준하여 적용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2.9.6.>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3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 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이 지침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8.>**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9.>**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6.>**

이 지침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

-----

---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등이 위원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b>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b>					
<b>① 추천기관</b>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b>② 포상금 지급대상자</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신고자		[ ] 외부 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b>③ 추천사유</b>					
<b>④ 조사결과</b>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b>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b>	청구여부	[ ] 있음 [ ] 없음	(기관명 : )		
	수령여부	[ ] 있음 [ ] 없음	(금액 : )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b> 귀하</p>					